

---

#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

---

2020. 2. 27.



국민권익위원회



## 목 차

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.....	1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 .....	5
① 반부패·공정 개혁 완수 .....	5
②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.....	10
③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.....	14
④ 국민의 목소리,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.....	18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.....	21

**【별첨】 국정과제 추진현황**

# 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

## 1. 지속적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

**반부패·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**

- 부패인식지수(CPI) : ('17) 54점 51위 → ('18) 57점 45위 → ('19) 59점 39위 (역대 최고점)
- 공공청렴지수(PI) : ('15) 8.04점 23위 → ('17) 8.02점 24위 → ('19) 8.34점 19위 (아시아 1위)
- 공공기관 청렴도 : ('17) 7.94점 → ('18) 8.12점 → ('19) 8.19점 (3년 연속 상승)

### □ 범국가적 반부패·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

- 대통령 주재 '반부패정책협의회' 구축('17.9.~) 및 「5개년 반부패종합계획」 추진('18.4.~)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력 제도화
  - ※ (반부패정책협의회)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, 전관특혜 근절 등 논의(총 5회)
  - (5개년 반부패종합계획) 4대 전략·50개 과제의 이행성과 체감을 위한 종합관리 추진
- 채용·학사비리, 탈세, 안전분야 부패 등 생활 속 반칙·특권 해소를 위한 '생활적폐대책협의회' 구성·운영('18.12.~)
  - ※ 생애주기별 9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 점검·논의를 위한 협의회 총 4회 개최
- 경제·언론·시민사회 등 각계 국민이 참여하는 '청렴사회민관협의회' ('18.3.~)를 중심으로 반부패·청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
  - ※ 공익법인 외부감사인 지정제 등 반부패 정책의제 제시,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추진 등(총 9회)

### □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강화
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등 공직자 행위기준을 강화\*하고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\*\* 제정('19.4.)으로 체계적 재정누수 대응 기반 마련
  - \*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및 갑질 금지, 이해충돌방지의무 신설('18.4, '18.12.) 등
  - \*\* 이하 「공공재정환수법」으로 약칭
- 채용비리,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 등 주요 부패현안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
  - ※ (채용비리) 특별채용 규정 일괄정비, 전수조사 정례화, 피해자 3,298명 구제 등 (해외출장)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, 관련 예산 집행·편성 중단 등

 반부패 개혁 범위를 불공정·특권 해소까지 확장할 필요

## 2.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

- 신고자 보호인용률 : ('17) 52.4% → ('18) 58.6% → ('19) 58.7%
- 부패·공익신고 보상·포상 : 최근 3년간 총 2,740건, 138억원 지급('17~'19년)

### □ 신고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

-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·지원 수준을 확대·강화\*하고,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신설
- \* 국회·법원에서의 증언 등에도 보호조치 적용, 신고로 인한 피해 시 구조금 도입 등

### □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·보상

- 역대 최다 보호사건 처리('19년, 236건)로 신고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,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균 보상 처리기간\*도 대폭 단축
- \* (공익신고) '17년, 416일 → '19년, 80일, (부패신고) '17년, 211일 → '19년, 79일

👉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요구

## 3. 국민중심·현장중심의 권익구제 및 정책소통 추진

- 권익구제 : 최근 3년간 고충민원 48,190건, 행정심판 72,462건 처리('17~'19년)

### □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

- 위법·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,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해결하여 16,416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
- ※ 고충민원 시정권고·의견표명·조정합의 7,451건, 행정심판 인용 8,965건('17~'19년)
- 촘촘한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('18.10.), 정부합동민원센터('19.10.), 소극행정 신고센터('19.3.) 등 신설제도를 내실있게 운영

### □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

- 범정부 소통시스템인 '국민신문고' 기능 고도화 및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
- 민원빅데이터 분석·개방, 국민생각함을 통한 소통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, 적극적인 정책 환류로 268건의 제도개선 추진
- ※ 「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」('19.1월 개통)를 통해 다양한 민원정보 정보를 대국민 공개

👉 보다 촘촘하고 넓은 권익구제로 범정부적 적극행정을 선도할 필요

## 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 업무추진 여건

□ (정치환경) 국가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, 공정성·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증가

○ 특히, '20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제21대 국회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중심의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

※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('17~'19년)

- ▲ (취약분야) 11개 사회분야 중 '정당·입법 분야'가 3년 연속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
- ▲ (우선과제) 국민들은 부패 근절을 위해 '적발·처벌 강화'(30.4%) 다음으로 '사회 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 강화'(20.3%)가 중요하다고 응답('19년)

□ (경제환경) 생산가능인구 감소('18년, △6.3만명) 등 저성장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증대

○ 공공·민간을 포괄하는 반부패 대책 추진, 집단민원과 같은 사회적 갈등의 적시 해결 등을 통한 정부신뢰 축적이 절실한 상황

※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(서울대, '17.12.)

- ▲ 부패인식지수(CPI) 10점 상승 시 경제성장률은 약 0.52%p 증가하고, 29조원의 예산투입 효과 및 연간 26,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

□ (사회환경)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신청 증가, SNS의 발달 등으로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확산·집단화되는 추세

○ 이에 지능정보기술(AI) 등을 활용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민원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'해결'하는 지능형(intelligent) 정부로의 전환 필요

※ '19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은 전년(475만건) 대비 68.2% 증가한 799만건으로, ①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, ②민원신청의 용이성, ③국민들의 참여욕구 증대 등에 기인

## 2

## 업무추진 방향

◇ 국정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고, 권익구제를 통한 적극·공감행정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

### 비전

“더 청렴하게, 더 국민 곁으로”

### 목표

국가 청렴수준의  
확실한 도약

국민 생활 속  
청렴·공정 문화 정착

적극적이고 따뜻한  
권익구제

주요계획	정책과제
① 반부패·공정 개혁 완수	■ 국민과 함께 반부패·공정 개혁에 전력
	■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
	■ 청렴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
②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	■ 기회장벽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·특혜요인 개선
	■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
	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
③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	■ 위법·부당,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
	■ 적극적 현장소통·상담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
	■ 민원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·협업 강화
④ 국민의 목소리,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	■ 정책의 생성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참여 확대
	■ 과학적 민원분석·정책환류로 신뢰받는 국정운영 지원

### 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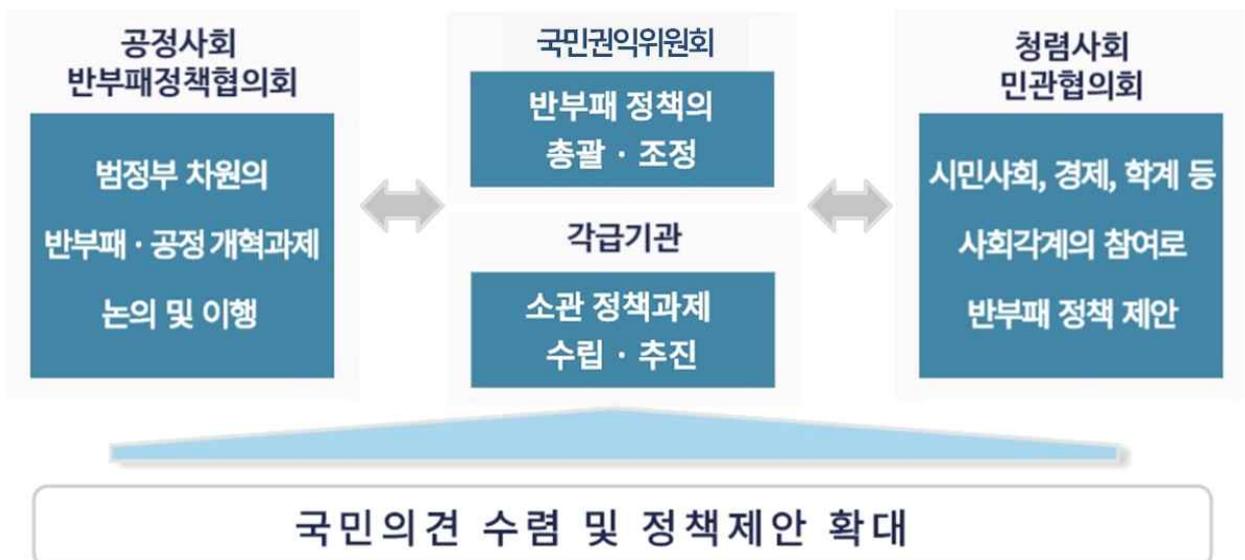
#### ① 반부패·공정 개혁 완수

##### 1 개요

- 정부 출범 후 국가 청렴수준의 척도인 부패인식지수(CPI)가 지속적으로 상승, 역대 최고의 평가를 기록('17년 54점→ '18년 57점→ '19년 59점)
  - 그러나, 국가 청렴수준의 상승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민의 기대와 높은 요구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한계
    - ※ 뇌물 없는 부패, 특정 이해집단에 포획된 정책설계 등 '부패'의 개념이 확장
- ⇒ 국정 4년차, 높아진 국민의 요구에 맞게 카르텔형 비리 개선,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등 반부패·공정 개혁에 전력을 다하여 상승추세인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

#####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###### (1) 국민과 함께 반부패·공정 개혁에 전력



□ 사회 각 부문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·공정 개혁 추진

- (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) 범정부 반부패·공정 개혁의 실질적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·조정·관리체계로서 기능 강화(연 2회)
  - ※ (의제 확대) 민생·경제분야 공정성 제고대책까지 확대, (운영기능 강화) 시의성 있는 과제 발굴 및 개선대책 이행 과정에서 정책조정 기능 강화

<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안건(예시) >

분야	세부 과제
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시제도 개편</li> <li>■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및 학생평가 관리 강화</li> </ul>
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친인척 등 채용과정 개입 차단 및 블라인드 채용 확대</li> <li>■ 공공·민간 사회 전반의 공정채용 확립</li> </ul>
납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지도층·고소득사업자 등 고질적 편법 증여·탈세 차단</li> <li>■ 조세심판관 사전 접촉 차단 등 직무수행 공정성 강화</li> </ul>
기업 상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문화예술 분야 갑질, 제작비·저작권료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</li> <li>■ 하도급·가맹·유통·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</li> </ul>
법 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관행 개혁</li> <li>■ 공정한 사건배당 등 검찰업무 시스템 개선</li> </ul>

- (생활적폐대책협의회) 국민생활 속 불공정관행·비리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·추진상황 점검,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홍보 등 추진(연 4회)
  - ※ 기존 생활적폐 9개 과제(10개 기관 협업) 외에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 중 정책 구체화, 부처 간 협업 등 관리가 필요한 사안은 신규과제로 발굴·관리
- (청렴사회민관협의회) 협의회 운영방식의 개편\*, 정책제안 및 논의 기능 정착\*\*을 통해 반부패 개혁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
  - \* 현행 3단계 논의구조를 2단계로 간소화(민관협의회-실무분과),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(~2월)
  - \*\* 국민의 시각에서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, 해법제시 (예시 : 대학입시제도 투명성 제고, 국화·지방의원 윤리강화,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등)
- (국민참여 확대) 국민생각함 제안·토의,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('19년 70명 → '20년 100명)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전 단계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와 협업\* 강화
  - 청렴포털을 통해 주요 반부패 정보\*\*를 공개하여 국민 참여 기반 마련
    - \* 부패취약분야 과제발굴·직접제안 강화, 국민눈높이에서 성과 모니터링 강화 등
    - \*\* 부패 관련 정보의 지역별, 성별·연령별, 월별 추이, 실시간 급증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제공

□ **범정부 차원의 반부패·공정정책 추진 노력 견인**

- (반부패 총괄기구 위상 확립) 위원회 조직을 부패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 기반 공고화  
 ※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및 「행정심판법」 개정안 국회 정무위 계류중
- (반부패 종합계획 실행) 50개 과제(18.4.)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 및 추진성과 확산을 통해 범정부 반부패개혁의 완수를 뒷받침(연 2회)  
 ※ (미이행 과제)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연원인 분석 및 신속한 이행 지원 (완료 과제) 주요 이행성과 발굴·확산, 대국민 홍보 등 강화
- (각급기관 감사관회의)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및 시책 우수사례 공유, 지역별 청렴건설팅을 통한 부패요인 파악 및 대책수립 지원
- (청렴도측정·부패방지시책평가·부패영향평가)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부패수준 진단·평가로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위한 유인 제공  
 ※ (청렴도) 내·외부 동시제보에 의한 적발도 감점하여 부패실태를 정확히 반영 (부패방지시책평가) 정책효과성 평가 시 정책수요자 평가를 통해 국민체감도 반영 (부패영향평가) 재정누수 등 부패취약 분야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·개선 강화

(2) **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**

□ **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조속한 법제화**

- (목적) 공직자의 사익과 공적 의무간의 충돌상황을 규제·관리하여 직무수행의 청렴성·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제도적 전환점 마련  
 - 특히,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,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관리 등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

<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」(20.1.8. 국회제출) 주요내용 >

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·기피	⑥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
②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	⑦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·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
③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	⑧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
④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·수익 금지	
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	

- (추진방안) 공직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, 조속한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 강화(~5월)

□ 청탁금지법·행동강령 등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

- (카르텔형 비리 차단) 입시, 취업 등 분야 실태점검 및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 개정\*을 통해 제도화된 불공정을 해소하고 특권의 세습 소지 차단
  - \* 학위취득·장학금 수여 등 입시·학사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,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자녀취업청탁 등 근절
- (행동강령 취약분야 개선) 국회·법원 등 헌법기관, 지방의회,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의 행동강령 제도운영 지원 및 취약분야 개선
- (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전심사제)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여부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고, '비위면직자등 취업심사위원회' 설치

(3) 청렴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

□ 청렴사회협약 확산을 통해 실천하는 청렴문화 정착

- (협약 체결·확산) 국민적 요구가 큰 분야의 협약체결 지원으로 사회 전반에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
  - ※ ('19년) 회계, 공기업, 국방 분야 → ('20년 예시) 기업·경제, 금융 분야 등으로 확산
- (이행·실천 지원) 협약 이행 점검·평가 모형 보급(1분기), 운영실태 분석·컨설팅, 우수사례\* 공유(하반기) 등을 통해 협약의 실천력과 문제해결력 제고
  - \* (한국수출입은행) 고객기업의 갑질근절 노력도를 신용평가 등 여신정책에 반영

□ 청렴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확산

- (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)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정무직,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
  - ※ 국무위원 워크숍 등 계기 청렴교육 실시, 국회·지방의원 대상 청렴교육 확산 지원
- (미래세대 교육확대) 초·중·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\* 운영 및 각급대학과 협업하여 청렴강좌를 교양과목으로 개설·운영
  - \* (초·중학생) 참여형·토론형 방식의 어린이 청렴 체험교실, (고등학생) 고3 청렴문화캠프
- (청렴연수원 인프라 강화) 전임 교수요원 배치, 교육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청렴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

□ **청렴정책을 민간부문에까지 확산**

- **(청탁금지법 생활규범화) ‘생활 속 반부패·공정규범’**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론사·민간기업 대상 **현장형·실천형 교육 확대**
  - ※ (언론사) 후원·협찬, 광고비·홍보비 집행 등 언론사 특화 콘텐츠 제작·활용
  - ※ (기업) 공사·계약 등 업무·단계별 법 위반 예방 방법, 신고 절차 등 교육 확대
- **(우수시책 공유 확대) 민간단체(감사협회 등)와 협업을 통해 부패방지 우수시책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**

분야	우수시책 사례(예시)	전파대상
공공의료기관	제약회사 청렴서약 제도 시행	민간의료기관
교육청	학교시설공사 사전안내제도 시행	사립학교

□ **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 공유를 통한 국제 반부패 논의 선도**

- **(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최)** 세계 최대 민관합동 반부패 국제포럼인 국제반부패회의(IACC, 6월)\*를 **성공적으로 개최**
  - 한국의 반부패 노력·성과를 알리고,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논의 확산
    - \* 140여개 국가의 정부 고위급, NGO, 국제기구 전문가, 글로벌 기업 CEO 등 반부패전문가 2,000여명 참석, 전체세션(8개)·워크숍(50여개) 등 논의
    - ※ 제19차 회의 주제 : “Designing 2030: Truth, Trust and Transparency”
- **(IACA 아태지부 유치)** 유일한 반부패교육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 아카데미(IACA) 아태지부를 유치, 한국의 청렴행정을 전 세계로 확산
  - ※ (추진절차) IACA 사무국에 아태지부 유치 신청(20년 상반기 예정) ⇨ 실무협의 ⇨ IACA 이사회 심의 ⇨ 당사국총회 의결 ⇨ 설립협정 체결 ⇨ 아태지부 개소

□ **국가청렴지수 개발·활용을 통한 반부패 협력사업 확대**

- **(모형보완)** '19년 개발한 국가청렴지수\* 측정모형을 기반으로 시험측정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타당성 높은 측정모형으로 발전·보완(~9월)
  - \* 공공부문(입법·사법 포함)과 민간 산업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부패수준 진단틀 (청렴도측정,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, 국외 다양한 평가결과를 활용)
- **(홍보·활용)**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('20.6월)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부패수준 진단모델을 홍보하고, 반부패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

## ②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

### 1 개요

- 교육·일자리·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·특권까지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 확산
  - 특히, 밀레니얼·2030 등 미래세대는 '기회의 불공정'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강력한 공정성 제고 대책을 요구
    - ※ 20대 청년들은 학업(진학, 성적 등), 직장(취업·승진 등), 경제적 부분(임금 차이 등)에서 실제로 불공정성을 경험했다고 응답(인구보건복지협회, '19.12.)
- ⇒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·공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·특혜요인을 발굴·개선

###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#### (1) 기회장벽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·특혜요인 개선

- 청년세대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·특혜요인 발굴
  - (국민생각함 의견수렴) 공정 감수성이 높은 청년층에게 불공정으로 작용하는 사안 등 '청년체감' 공정과제 신규 발굴(~3월)
    - ※ '시민(청년)참여 토론회', '청년 아이디어 공모전' 등을 통해 신규 과제 발굴 ⇒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아이디어 숙의 워크숍 ⇒ 제도개선 연계
  - (민원빅데이터 분석) 생애주기별로 불공정·부조리가 빈번한 분야의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

#### < 생애주기별 불공정 발생 주요 민원 분야 (예시) >

생애주기	민원분석 과제
유아·청소년기	지역별 출산지원정책, 학교폭력위원회 문제, 입시 관련 민원 등
청년기·성년기	취업준비생 교육비, 비정규직 차별, 임금체불 관련 민원 등
노년기	IT 소외 문제, 요양서비스 부조리 등

□ 각종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 요소를 과감히 개선

- (제도개선) 국민신문고, 국민청원,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일상 속 불공정·특권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 - ※ (개선대상) 기화·절차의 불공정, 변화하는 소비문화(소유 → 공유·구독)를 따라가지 못해 생활 속 불공정을 초래하는 제도 등

분 야	개선 과제(예시)
기회장벽 제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비정규직 차별소지가 있는 제도 속 불공정 개선</li> <li>▸ 각종 시험·자격 등 채용분야 불공정 개선</li> </ul>
투명하고 공정한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과업범위와 무관한 비용전가 등 공공계약 분야 불공정 해소</li> <li>▸ 국방 시설의 사용허가 관련 불공정 계약조항 개선</li> </ul>
국민 삶 속 불공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음악·동영상·도서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(10~20대)</li> <li>▸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의 불공정 요소 개선(30~40대)</li> <li>▸ 허위·과장광고 등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(40대 이상)</li> </ul>

- (공공기관 내부규정 점검)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3개년 전수 점검을 통해 공공계약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·불합리한 규정 개선

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공직유관단체(총 491개) 중 규모가 크고, 국민생활과의 밀접성이 높은 <b>187개 기관</b>(시장형·준시장형 공기업 36개, 도시개발·관광·교통·시설관리 분야 지방공사·공단 151개 기관) <b>우선 점검</b></li> <li>* '21~'22년에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(304개) 대상 추진</li> </ul>
주요 점검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(직권·재량 남용) 소비자나 계약당사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 명시 등</li> <li>▸ (복리후생) 과도한 지원금 등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</li> <li>▸ (인사) 정규직·비정규직 채용 및 전환, 승진 관련 불공정 규정 등</li> </ul>

□ 채용비리 근절대책 지속 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 확산

- (전수조사) 공공기관별 직전 연도의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, '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('19.12.~'20.4.)
  - ※ (대상) ① '18년 조사 이후 신규채용,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, ③ 신고사건 등
- (중점·특별점검) 채용비리 빈발분야 및 점검 사각지대(지자체 등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) 대상 추가점검 실시
- (공정채용 문화 확산)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작·배포\* 및 취약분야 업종별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
  - \* 인사처, 기재부 등과 협업을 통해 '채용지침 표준안', '공정채용 가이드북' 제작·교육

## (2) 부패·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

### □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감시 기능 강화

- (집중신고) 공수처 설치 등 여건변화에 따라 권력형 부패 및 불법적 반칙·특권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(7월~)
- (청렴포털) 범정부 통합 반부패 신고창구로서 청렴포털 운영('20.2월)으로 신고창구를 일원화, 간편신고\*를 통해 신고 활성화 도모  
\* 정확한 부패유형(부패·공익 침해행위, 부정청탁·행동강령 위반 등)을 몰라도 손쉽게 신고
- (대리신고제도 활성화)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적극 홍보·교육 실시

### □ 신고자 보호대상·범위 확대로 보호망 강화

- (대상법률 확대) 현행 법률(1,470개)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(284개 → 468개)\*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
\* 병역법, 단말기유통법,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를 위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('20.2.21.)
- (책임감면 확대) 권익위 요구가 없더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·행정처분 시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(7월~)
- (보호 강화) 보호조치 결정 이후 이행여부 및 추가 불이익 발생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, 재취업 지원\* 등 사후관리 강화  
\* 관계기관(고용부) 협의를 통해 신고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에 포함 등

### □ 신고자 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

- (보상·포상 확대) 부패·공익신고 보상금의 정률(보상대상가액의 30%) 지급 및 상한액(30억) 폐지, 공익신고 보상·포상 지급사유 확대\* 등 추진  
\* (기존) '국가·지자체'의 수입 회복·증대 등 → (확대) '공공기관'의 수입 회복·증대 등
- (지원 강화) 보상금 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고, 신고자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해 「신고자 보호기금」 도입 등 추진(기재부 협의 추진)  
\* 기금 신설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('17.8.)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('19.6.) 의원 입법 발의

### (3)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

#### □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안정적 시행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

- '나랏돈의 공정 사용' 기준으로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의 안정적 시행(20.1.1.)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 방지

<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주요내용 >

√ (대상) : 전체 공공기관(16,492개) 소관 법률(913개)·자치법규(6만5천여개)에 근거한 보조금,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(약 229조원 추산)

√ (주요내용)

- ①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정청구에 대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
- ② 허위·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
- ③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

- (교육·홍보) 공공재정 수급자, 일반국민, 공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·홍보\*를 통해 '눈먼 나랏돈은 없다'는 인식변화 유도

- 소관기관별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사업 현황 조사 실시 병행(4~6월)

\* (수급자) 제도·주요사례 홍보로 오청구·오지급 예방, (일반국민) 재정건전성 확보 등 긍정적 기대효과 홍보, (공공기관) 일선현장 중심의 워크숍·매뉴얼 배포

- (해석자문단 운영) 제도 시행 초기 다양한 해석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전문가·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해석자문단 구성·운영(20.2월~)

#### □ 실태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 분석·개선

- (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) 신고처리 단계부터 부정청구 관련 정보\*를 수집·분석하여 '부정수급 징후가 있는 취약분야'를 예측

\* 부정청구 발생 근거법률, 사업명, 소관기관, 발생내역·규모, 환수·제재내역 등

- 취약분야 실태점검·공개, 제도개선을 통한 부정청구 원천 방지(~12월)

- (현행법령 개선) 개별 공공재정지급금 근거법령 중 공공재정환수법의 환수·제재보다 강도가 약한 법령을 발굴·개선

※ 환수규정이 있거나(138개) 제재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(21개) 법률에 대해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부과·제재를 하도록 개선

### 3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

#### 1 개요

-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편·부당한 행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증가

※ '19년 국민신문고 민원은 799만건으로 전년(475만건) 대비 68.2% 증가

- ⇒ 국민고충 해결 최후의 보루로서 위법·부당한 행정에 따른 권익침해 해소,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선도

####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##### (1) 위법·부당,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

###### □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권익구제 추진

- (고충민원) 위법·부당한 행정 등에 대한 시정권고·의견표명 확대

중점 분야	추진 방향
수사과정의 적정성 확보	· 검·경 수사권 조정, 공수처 설치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사과정의 고지의무 불이행·수사지연 등 절차 위반, 불친절 등에 대한 권고 강화
기업고충 해소	· 각종 혁신산업(소재·부품·장비, 바이오헬스 등) 관련 인·허가, 고용, 인증, 자금지원 등 경영 상 애로사항 신속 해결
복지 분야 고충민원 해결	·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곤란, 긴급지원 요청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충민원 적극 대응

- (행정심판) 국선대리인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, 온라인 사건 검색 기능도 강화해 행정심판 접수·처리 전반의 국민편의 제고(~6월)

기 존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국선대리인 신청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</li> <li>· (사건검색) 세부 진행상황 및 보충서류 접수여부 확인 곤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국선대리인 신청) 「행정정보공동망」을 통해 서류 없이 자격요건 확인</li> <li>· (사건검색) 단계별 진행상황 및 제출 서류 확인 기능 신설</li> </ul>

□ 포용사회를 저해하는 집단민원의 조정·해결에 역량 집중

- (집단민원 조정 강화)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,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대형 집단민원(100인 이상)을 중점 관리·해결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

< '20년 해결 추진 주요 사례 >

- ▲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무주(無主) 부동산 문제 해결 (장기 미해결)
  - (문제점) 토지 주인이 6.25때 북한으로 피난하여 주인이 없는 수복지역 내 무주지를 정책이주민들이 60여년간 개간·경작해왔으나, 소유권 문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
  - (추진성과) 범정부 TF(10개 기관) 구성 및 조정안(국유화 후 매각) 합의 ('18.12월), 소유권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('20.1.9.)
  - (해결방안) 매각 대상·면적 등 세부기준을 마련(시행령 개정)하여 민원 해결
- ▲ 학교 주변 인도없는 통학로의 일제 조사·개선 (전국적 발생)
  - (문제점) 인도가 없거나, 있더라도 전신주·통신주 등 장애물 때문에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
  - (해결방안) 교육청-지자체-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태조사·대책수립 후 전신주 이설, 횡단보도 설치 등 통학로 안전 확보

- (법제화) 여러 기관과 관련되거나 민-민 갈등까지 복합된 경우가 많은 집단민원의 특성을 감안, 전문적·효율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체계 마련  
※ 추진일정 : 집단민원 전담 TF 시범운영(7월~) → 집단민원 조정 법제화 추진(12월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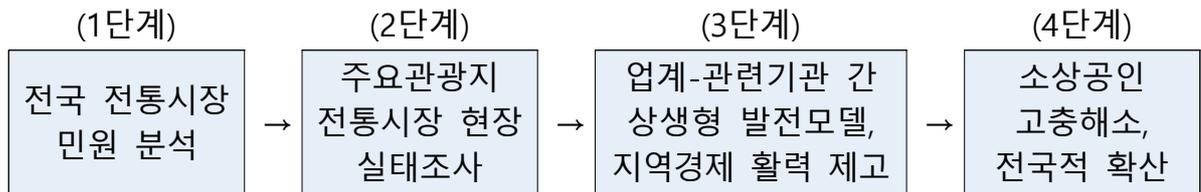
□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행정기관의 책임성 강화

- (면책 확대) 위법·부당 행정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책임에 대한 감경·면제 확대  
※ 기관별 자체 감사규정에 반영 : ('19) 중앙행정기관 → ('20) 지자체, 공직유관단체
- (인식 제고) 기관별 시정권고 수용 상황에 대한 언론 공표 및 고충 민원 빈발기관 대상 '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'\* 실시로 적극행정 유인  
\* 60건의 고충해소 사례를 수록한 「적극행정 실천 사례집」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

## (2) 적극적인 현장소통·상담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

### □ 민생·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고충해소 확대

- (포용)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·산·어촌,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민생·이동신문고 확대로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강화
  - ※ 방방곡곡 현장속으로 : 전국 243개 지자체(광역 17, 기초 226)를 연 1회 이상 방문 추진
- (미래동력) 신산업, 생활SOC 관련 영세·중소기업, 2030세대 중심의 '기업고충 현장회의' 추진으로 혁신경제 성과 지원(매월)
  - ※ (신산업) 소재·부품·장비, 인공지능, 바이오헬스, 미래차, (생활SOC) 도시재생, 노후산단, 지역관광, (2030세대) 대학생 창업동아리, 스타트업 기업 등
- (지역경제) 지역별 전통시장에서 빈발하는 문제에 대해 민원분석, 실태조사 등을 통해 '상생형 발전모델'을 마련,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  - ※ "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 프로젝트"(예시)



### □ 정부합동민원센터 '한 곳에서 한번에' 종합적 민원 상담

- (복합민원 신속 대응) 처리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다수 부처 공무원, 전문가가 한 곳에서 신속·정확하게 상담
  - ※ 기관 간 역할 조정·협의를 위한 '민원상담협의회' 운영, 시·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·화상 상담(서울-과천-대전-세종 청사 연계) 활성화
- (민원상담서비스 향상) 국민-정부 소통의 1차 관문인 국민콜110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여 상담역량을 강화

- 지능형 통합콜센터\*로의 개편을 추진해 민원상담의 품질 제고

\* 공공부문 콜센터를 통합·연계하여 원스톱 상담을 구현하고, AI 기술을 적용해 음성상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·정책환류('20~'22)

### (3) 민원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·협업 강화

#### □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·제도 개선

- (제도개선) 국민신문고·국민콜110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사회안전망 강화, 경제활력 제고 등 포용사회를 위한 법·제도 개선 추진

분 야	개선 과제(예시)
더 편리하게	· 핵심 소재부품산업 창업 및 성능검증 체계 개선 · 채용과정 관련 불편 관행 개선
더 안전하게	·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 방안 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자격·관리 체계 개선
더 빈틈없이	· 중도입국 및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개선 ·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관리 강화

- (빈발민원 해결) 빈발·반복민원\*에 대한 기획조사, 관계기관 협업·조정 등을 통해 국민고충 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
\* (예시) 신도시 내 생활기반시설 부족, 주거지역 건축 공사 관련 환경 피해 등
- (행정심판 시정조치) 사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등 시정조치(「행정심판법」 제59조) 적극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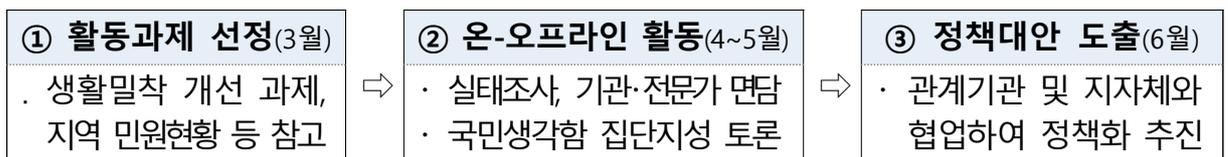
#### □ 참여·협업 기반 민원대응으로 지역문제 해결역량 강화

- (지방읍부즈만 확대) 지방분권 강화 추세 속에서 지역단위 민원·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방읍부즈만 설치 확대 및 역량제고 지원  
※ (설치 확대) '19년 : 42개 지자체 → '20년 : 55개 이상 지자체  
(지원·협업) 지방읍부즈만협의회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, 신규운영 지자체 컨설팅 등

- (지역별 정책공약 개발 지원) 권익위-중앙선관위 간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·특성을 반영한 주요 정책공약('20.4월, 21대 총선)의 수립 지원



- (청년참여형 지역문제 해결) 권익위(국민생각함) - 대학 간 연계를 확대해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, 지역문제의 적극적 해결 유도



※ 일정 : ('19) 5개 대학 → ('20) 충북대 경북대 등 주요 거점대학 확대 → ('21~'22) 전 권역으로 확산

## 4 국민의 목소리,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

### 1 개요

- 국민들은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생성-집행-사후관리 등 '정책의 생애주기' 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감형 소통플랫폼을 요구

※ 기존의 참여는 △의견수렴(40%) △심의(22%) △자문(13%) 순(지방행정연구원, '19.9.)

⇒ 차세대 국민신문고·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참여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감도 높은 국정운영 지원

###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#### (1) 정책의 생성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참여 확대

「차세대 국민신문고」를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 
민원편의 높이고↑, 참여도 확대하고↑

민원신청·처리	민원분석으로 사회적 이슈 발굴	공론화·제도개선
민원 빅데이터에 기반해 유사 민원사례 자동 제공 ☞ 민원의 근원적 감축	+	AI를 적용한 민원분석기능 고도화로 사회현안 조기 식별 ☞ 빈발·급증민원에 대한 조기 정책대응 지원
	+	국민생각함에서 관심안건 자동추천 및 정책반영 현황 공개 ☞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 되는 경험의 장 제공

#### □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민원 신청·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

- (신청편의 제고) 지능정보기술(AI)을 적용해 민원신청 단계부터 유사 사례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민원의 근원적 감축\* 유도(차세대 국민신문고 2.3. 개통)

\* ① 민원신청 시 정확도 높은 유사 민원사례 자동 제공 → ② 국민 불편·궁금사항을 즉시 해소 → ③ 단순 질의형 민원 등 감축

- (처리 효율화) 접수단계에서 민원 내용·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 기관 내 처리부서를 자동 배정하여 신속한 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
  - ※ (기존) 연간 800만 건 이상의 민원내용을 분류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부서 지정
  - ☞ (개선) 민원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처리부서를 시스템에서 자동 지정

<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 신청·처리 개선사항 >

- 국민의 민원 신청을 더 편하게, 좋은 정보를 더 많이!
  - (기존) 모바일 신청 편의성 부족 → (개선) 모든 기기에서 간편하게 민원 신청
  - (기존) 유사 질의민원 반복 제기 → (개선) 내가 알고 싶은 민원사례 자동 제공
-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, 더 똑똑하게!
  - (기존) 담당자가 민원 처리부서 배정 → (개선) 시스템에서 적합한 처리부서 자동 추천배정
  - (기존) 집단민원 접수·처리 시간↑ → (개선) 집단민원 일괄 접수 및 병합 처리

□ 국민생각함 제안 아이디어의 공론화·정책화 확대

- (국민생각함 활성화) 이용자 성향 분석\*을 통해 관심안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, 안건 담당자의 전문가 초대 기능 신설 등으로 참여 확대 유도
  - \* 이용자별 민원신청 현황, 국민생각함 안건 조회·발제·참여 횟수 등을 AI 기반으로 자동 분석
- (사후관리 강화) 아이디어의 정책반영 현황을 사용자별로 공개하여 '나의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'되는 경험의 장 제공
- (정책반영 확대)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, 설문조사, 시민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 적극 발굴·개선
  - ※ 국민생각함 정책·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사례('19.10~11월)

- 돌봄교실 수요조사 시 맞벌이 구직 중인 가정에도 사용기회 부여 필요
- 장애인 채용을 위한 면접 시 교통편의 제공, 복장 간소화 등 배려 필요
-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한 계약기간 편법설정 개선 필요

-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실제 개선된 제도의 효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'이달의 개선사례'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·확산(매월)

※ ('20.1월 개선사례) 폐차장에 들어간 차 정기검사 안 받았다고 과태료 부과 안돼요!

## (2) 과학적 민원분석·정책환류로 신뢰받는 국정운영 지원

### □ 민원분석의 적시성·정확도 제고로 정책환류 기능 강화

- (분석 분야) 생활 속 불공정, 일·돌봄·주거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민원을 분석·제공해 공정사회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 지원

분 야	분석과제(예시)
생활 속 불공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련</li> <li>· 배달대행업 시장의 갑을관계</li> <li>·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, 환불·위약 문제 등</li> </ul>
포용국가 사회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일) 장애인일자리</li> <li>· (배움) 학자금 대출·상환</li> <li>· (돌봄) 다자녀 지원정책</li> <li>· (주거·지역) 혁신도시 관련 민원</li> <li>· (환경·안전) 음식점 환기시설,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 등</li> </ul>

- (정확도 제고) 고도화된 분석 기능(예 : 키워드 검색 → 문장 의미 분석) 적용 및 외부 데이터 연계\* 강화로 주요 사회현안을 조기에 식별
  - \* (현행) 국민신문고에 한정 → (개선) 뉴스, SNS 등 외부데이터 수집·연계
- (민원예보 관리 강화) 국민신문고에 각급 기관이 빈발·급증·집단 민원 대응과정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'이슈관리' 기능 도입(3월~)
  - 민원예보 발령·대응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점검회의, 기관 간 조정회의 등에 공유하여 민원감축을 위한 조정기회 마련

### □ 민원정보 공개 확대 및 각급기관의 민원분석 역량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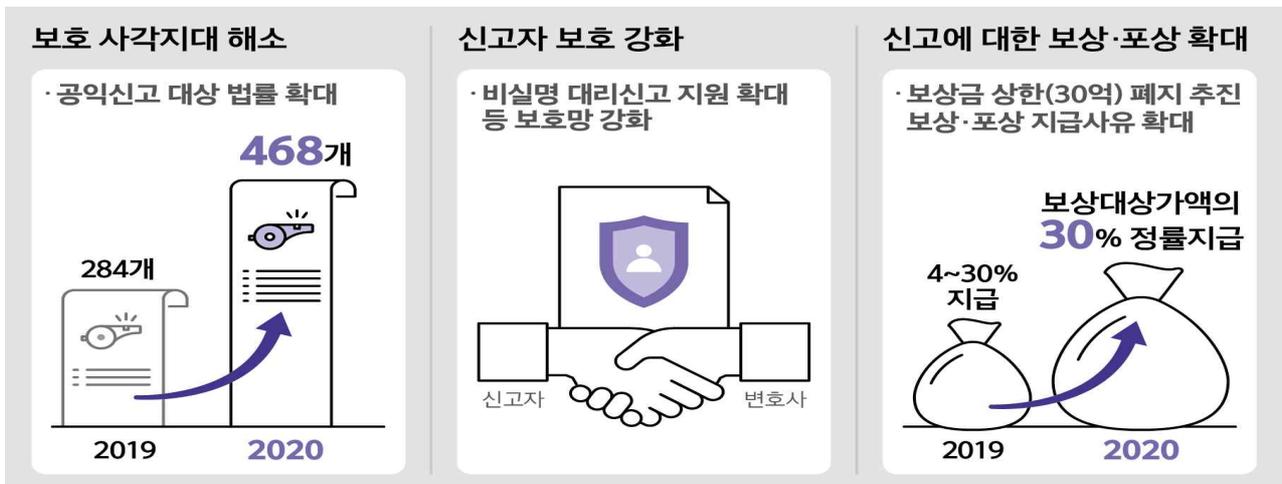
- (공개 확대)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기능을 반영한 「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」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다양한 분석정보 개방
  - ※ (예시) 단순 키워드 형태로 제공했던 '오늘의 TOP이슈'를 문장형으로 제공(기존 : 미세먼지 → 개선 : 미세먼지 수치기준 변경) 등
- (기관 지원) 각급기관이 민원데이터를 자체 분석·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\* 및 민원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·컨설팅\*\* 확대
  - \* 「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) 개정(12월)
  - \*\* 지방자치인재개발원, 지자체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과정에 민원분석 교과목 편성 등

## 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### ① 더 청렴하고 공정하게,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.



### ②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,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.



### ③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, 고충과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.



국정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<p>①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(주관: 법무부, 협조: 권익위·문체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인 '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' 수립('18.4.)</li> <li>○ 범정부 반부패 백서 제작('18.12.)</li> <li>○ '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' 추진과제 (50개) 이행점검 실시('19.7, '20.1.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' 에 대한 실효성있는 이행점검과 추진성과 확산을 통해 범정부 반부패개혁 완수</li> </ul>
<p>②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(주관: 권익위·법무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추진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('17.9, '18.4, '18.11, '19.6, '19.11.)</li> <li>○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를 위한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('18.4.)</li> <li>○ 범정부 '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' 출범('18.11.) 및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('19.2.)</li> <li>○ 보조금 등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제정('19.4.)</li> <li>○ 생활적폐대책협의회('18.12.출범) 중심으로 채용비리, 학사비리, 갑질, 탈세 등 9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(연중)</li> <li>○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개정으로 비실명 대리 신고 도입('18.10.)</li> <li>-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확대,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등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개정('19.4, '19.12.)</li> <li>-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인단 구성('19.7.)</li> </ul> </li> <li>○ 국민중심 반부패·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('18.3.출범)를 통한 반부패 정책 제안·점검·평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'로의 확대·개편을 통해 반부패 정책협의체 기능강화 및 의제확대</li> <li>○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정 추진</li> <li>○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및 정부대책 발표 ('20.4.예정)</li> <li>○ 「공공재정 환수법」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재정부패의 근원적 차단</li> <li>○ 부패공익신고 보호·보상 강화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병역법 등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(284개→468개)</li> <li>-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확대, 재취업 지원</li> <li>- 부패·공익신고 보상 확대</li> </ul> </li> <li>○ 청렴사회협약 체결·이행 확산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 간소화 등 청렴·공정문화 정착 추진</li> </ul>